

출구없는 고용쇼크... 취업자 증가폭 석달째 10만명 대

통계청 '4월 고용동향'

12.3만명 ↑... 금융위기 후 최악 최저임금 등 여파 서비스업 급감 제조업도 10개월 만에 감소 전환

제조업 구조조정과 주력산업 부진으로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째 10만 명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고용시장 불안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 8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12만 3000명 증가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1월의 33만 4000명을 제외하고 2월 10만 4000명, 3월 11만 2000명 등 3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이후 처음이다. 산업별로 보면 증가세를 이어갔던 제



조업의 약화가 두드러졌다.

2017년 6월부터 10개월 연속 취업자가 증가했던 제조업은 지난달 6만 8000명 줄어 감소로 전환했다.

특히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과 의료·정밀·광학기·시계 제조업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의 경우 작년엔 취업자가 평균 11만 9000명 증가해 고용시장을 견인했지만 올해는 1월 9만 9000명, 2월 6만 4000명, 3월 4만 4000명, 4월 3만 4000명

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점차 축소하는 양상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여파로 우려를 샀던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도 2만 8000명 줄었다.

도매 및 소매업은 6만 1000명, 교육서비스업은 10만 6000명 줄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제조업 감소의 영향으로 줄어든다.

6개월째 감소세인 교육서비스업은 학생 수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이에 반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14만 4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 1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2개월째 감소하던 자영업자도 1년 전보다 2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60.9%로 1년 전보다 0.1%p 내렸고, 실업자는 116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6000명 줄었지만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실업률은 4.1%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0.

5%p 하락한 10.7%를 기록했다.

제강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3.4%로 0.2%p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4000명 늘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작년 6월부터 증가세를 이어오던 제조업 취업자가 4월에 감소로 전환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10만 명대 기록했다"며 "작년 4월 취업자 증가 폭이 42만 명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증가 폭이 20만 명대 중반 정도로 과거보다 못하기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가가 예전처럼 30만 명대로 증가하는 것은 경기에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인구구조상 어렵다"며 "그럼에도 3개월 연속 10만 명대는 과거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의도·가격·횡수 등 고려 처벌수위 판단

>> 1면 '해외직구품 되팔면...'서 계속

하지만 올해 초부터 관세청은 개인 사용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 하고 반품한 때 수출신고필증 대신 수출이 인정되는 서류(운송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관세청은 관세환급을 받은 반품 물품의 대부분(85%)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을 물품 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한정했고 1000달러를 넘는 물품은 기존처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관련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처로 반품을 진행하는데 있어 국가가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만,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세금을 돌려준다는 개념을 제시했는데도 국내에서 직구품을 되팔게 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라며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자가소비와 다른 상업적 거래형태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 제품의 재고를 사용한 물건으로 인위적으로 둔갑하여 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관세청은 "법에서는 위반내용에 따른 처벌수위로서 과도한 법집행을 방지하고자 위반 의도와 가격, 위반 횡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경고, 과태료 또는 벌금 금액 조정,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된다"고 말했다.

또 "상업적 이익을 위해 수입을 한 사람들은 소액 물품이라도 관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용으로 구입한 후 재판에 처하는 행위는 엄연히 법에 저촉된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의 중고 판매 커뮤니티에는 해외직구 품목을 되파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청은 제도 기간이 끝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또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이 같은 규정을 대중에게 인지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일반인 엔젤투자 확대 위해 200억 마중물

중소벤처부 '엔젤투자 혁신방안' 내년 '민간 엔젤모펀드' 도입키로 개인투자조합 등록절차도 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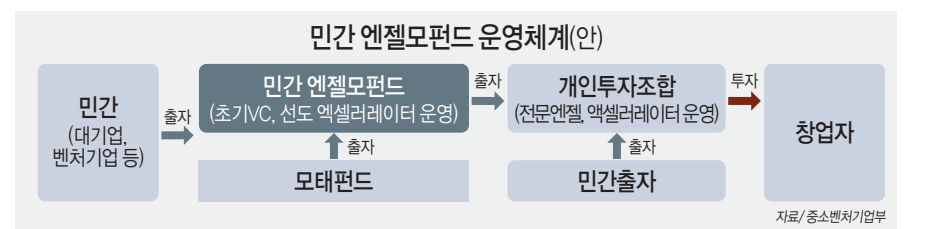
정부가 일반 국민들이 엔젤투자에 참여해 벤처기업 등의 성장 과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민간 엔젤모펀드'를 내년에 도입키로 했다.

또 개인투자조합 운용주체(GP)의 무출자비율을 현행 5%에서 결성규모별로 1~5%로 차등화해 개인투자조합의 대형화를 유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엔젤투자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민간 엔젤모펀드는 벤처캐피탈 및 액셀러레이터가 대기업이나 선배벤처 등과 함께 민간이 50%, 모태펀드가 50%를 구성해 펀드를 만들고,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수시로 제안을 받아 소액출자 형태로 운용하는 구조다.

민간 엔젤 모펀드를 도입하면 기존에 한국벤처투자자가 운영하는 엔젤모펀드(공공재원 100%) 보다 2배 이상의 민간자금



이 투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 민간이 직접 모펀드를 운영함에 따라 업계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도 가능해 기존의 엔젤모펀드와 경쟁 보완을 통해 성과창출도 기대된다.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GP의 의무투자비율은 10억원 이하의 경우 5%, 10억~20억원은 3%, 20억원 이상은 1%로 차등화한다.

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을 온라인화해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관리보수 등)에 대

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도 추진하기로 했다.

4월 말 현재 액셀러레이터는 82개가 등록돼 있다. 24개 액셀러레이터가 76개의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투자 확대와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엔젤투자 허브'를 설치·운영하고 엔젤투자자 양성 및 창업기업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벤처캐피탈협회·엔젤협회가 별도 운영하던 상시매칭서비스도 통합해 '지역 창업자-투자자간 윈윈투 투자 매칭 서비스'도 제공한다.

홍준호 중소벤처부 장관은 "민간 투자자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 투자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개편해 창업지원의 성공가능성을 높여 나가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日 경제성장세 2년 만에 주춤

1분기 국내총생산 0.2% 감소 9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

일본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해 9분기 만에 위축세로 돌아섰다.

일본 내각부는 16일 1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0.2%, 연율 환산으로 0.6% 각각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전 분기 대비 0.0%, 연율 환산 0.1% 감소를 밑도는 것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로도 0.2% 감소해 시장 예상치(0.3% 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일본 GDP는 전 분기 대비로 2015년 4분기 0.3% 감소(연율 마이너스 1.1%)를 기록한 이후 2016년 1분기부터는 8분기



연속 증가했다.

올해 1분기 GDP 감소가 확정되면 일본 거품경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9년 이후 가장 기간을 기록했던 성장세가 끝나는 것이다. 그 이전 기록은 1986년 2분기부터 1989년 1분기까지 12분기 연속 성장이었다. /연합뉴스

對中 수출 회복세... 농식품 수출 '역대 최대'

1~4월 22억 달러... 전년비 2.7% ↑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타격을 받았던 우리 농식품의 대 중국 수출이 최근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중국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올 4월까지 농식품 수출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특히, 신선농산물의 수출증가가 뚜렷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농식품 수출액은 22억 4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00만 달러(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당월 수출액도 5억 9000만 달러로

수출 실적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4월 당월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해 국가전체 당월 실적은 1.5%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타 산업 대비 농식품 분야의 수출증가폭이 컸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농식품 수출증가 원인을 크게 ▲신선농산물 역대 최대수출(95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9% ↑) ▲중국시장의 회복세 ▲아세안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수요증대 등 세 가지로 꼽고 있다.

우선 신선농산물 수출액은 4억 2100만 달러(29% ↑)로 인삼류(39%) 및 과실류(25%)가 수출을 견인했다.

인삼류는 중화권 뿌리삼 수요증가, 미국 대형마트(Costco) 등에 음료제품 입점 확대, 아세안 및 일본의 건강기능식품 관심 증대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또한 신선농산물 최대 시장인 일본에서 인삼음료·파프리카·김치·토마토 등 신선농산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했다.

중국 시장 수출 회복도 눈여겨 볼 만하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사드사태 이후 농식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두 자릿 수 감소를 이어왔지만 올해 4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0%나 증가하며 대중 농식품 수출 감소폭을 한 자릿수(5.5% ↓)로 줄였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